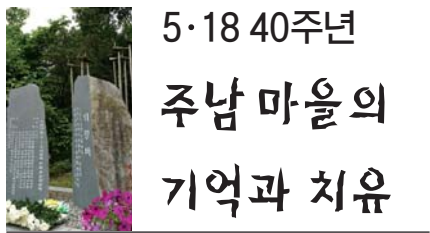


잊혀지지 않는 아픔...“그때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



5·18 40주년 주남 마을의 기억과 치유

〈중〉 40년의 트라우마

주남마을 주민들에겐 40년 전 참사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다. “40년이 흘렀어도 그때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주민들은 당시의 고통을 가슴 깊이 묻어놓았을 뿐이다.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보듬는 것은 온전히 이

공수부대 위협에 벌벌 떨고
무심코 밖 내다보다 총 맞아
주남저수지선 시신 썩는 냄새
큰 소리만 나면 지금도 ‘깜짝’

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월남동 주남마을에는 98명(4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 왼쪽으로 ‘서당골’, 오른쪽으로 ‘고실’이라는 무등산 골짜기 사이에 자리잡은 자연부락이다.

서당골을 통해 조선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고 고실을 넘으면 화순과 연결된다. 1980년 당시 계엄군이 주둔지로 삼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마을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것도 그 때부터였다.
마을에 첫 발을 디딘 계엄군은 육군이었다. 5월 21일, 공수부대가 들어오면서 마을 분위기는 급변했다.
공수부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민들 통행을 금지했다. 총부리를 겨누며 아예 방 밖으로 나서지 말라고 겁을 줬다. 당시 정미소집 아들은 뺨뺨히 밖을 내다보다 어깨에 총을 맞기도 했었다. 아파도 병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유창애(70)할머니는 “남편이 사타구니 안쪽에 혹이 나 병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쏜다고 해 어찌나 무섭던지...”라며 손사래를 쳤다. 유 할머니는 “남편도 무서운 마음에 군인 앞에서 아픈 부위 보여주겠다며 바지를 내렸을까”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유 할머니는 “당시 교련복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끌려 간 것을 봤는데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교련복만 발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임희주(58)씨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6월 어느날, 친구 6·7명과 놀러 간 주남저수지에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슨 일인

가 살펴보다가 구더기가 있는 장소를 슬며시 견어봤더니 시신의 발이 튀어나와 그대로 달아나 반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임씨가 발견한 장소는 미니버스 충격사건 부상자가 끌려가 사살을 당해 목한 장소다. 현재 여기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임씨는 매년 이맘때면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움을 견뎌내고 있다.
임씨는 “40년이 지나도 근처에만 가면 그때 생각이 난다”면서 “아직도 그 장소를 갈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김복례(84) 할머니도 당시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계엄군이 전남대 생을 다 죽인다는 소문에도, 마을 인근 ‘바람모퉁이’(광주 동구 소태동 다복조선

터 인근)에서 거적에 쌓인 시신 10여구를 본 뒤라 전남대 1학년생인 아들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심근순(90)할머니는 당시 계엄군 총소리를 잊지 못한다. 40년 전 접한 충격은 지금도 이어지면서 큰 소리만 나면 가슴이 뛰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 할머니는 “당시 계엄군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우리집에서 잔 손님이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에서 갔다가 총소리 때문에 아침까지 화장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면서 “그 총소리를 잊지 못해 아직도 큰 소리만 나면 놀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월길 정비 5·18 40주년을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사적지 순례길인 ‘오월길’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남대서 전두환 흔적 사라진다...동상 철거·전두환 길 폐지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 시절 만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시)에서 전씨의 흔적이 사라진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충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청남대 전두환동상(사진) 철거와 전두환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 관계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시중 충북도지사는 40주년을 맞는 5·18인 오는 18일

까지 전씨와 노태우씨의 동상 철거를 약속했다. 동상 철거를 시작으로 ‘전두환 길’을 비롯한 전씨의 모든 흔적도 없애기로 했다.
옛 청남대에는 ▲전두환 대통령길 산책로(1.5km) ▲전씨 동상과 각종 안내판 ▲대통령 기념관 ▲골프장 등이 있고 각종 안내판에는 전씨의 행적을 찬양·기념하는 내용과 사진 등이 기록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인회에 매년 150만원 줬는데...” 충금지하사가 경비원의 하소연

근로 연장 대가 발전기부금 내
경비원 3명 “계약 해지 억울”
상인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도시공사 “우리와는 상관없어”

“나이 먹어도 계속 채용한다길래 줬는데...”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사가 경비원으로 15년간 일하다 지난해 말 그만둔 A(69)씨는 상인회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게 여간 속상한 게 아니다. 더 일할 수 있는 자신감뿐 아니라 만

65세가 되던 2016년부터 상인회에 매년 150만원씩 냈던 돈을 생각하니 억울했기 때문이다.
A씨 주장은 이렇다. 상인회가 A씨를 비롯한 만 65세 이상 경비원들에게 ‘근로 연장에 도움을 줬으니 발전기부금을 내라’고 요구해 매년 상인회에 일정 비용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경비원 3명이 2016년부터 그동안 상당한 현금만 195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금지하사가 경비원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경비용역사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회가 용역업체를 통해 계속 고용을 하는 쪽으로 입김을 불

어넣을 수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A씨 등이 상인회에 돈을 낸 것도 무관하지 않고 실제 발전기부금을 내면 고용이 유지됐다고 했다.
충금지하사가상인회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발전기부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경비원들에게 고용을 약속하고 금전 상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충금지하사가 경비용역사업을 새로 맡은 업체 대표는 “기존 경비원 4명 가운데 3명이 바뀐 이유는, 나이와 근무실적 등은 고려한 결정”이라며 “발전기부금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충금지하사가를 관할하는 광주도시공사도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가 지난 2월 충금지하사가 관리주체인 광주도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경비 문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관리를 맡고 있는 지하사가 내 부적절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작은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1년만 더 일하고 싶었다”며 “근로 조건에 나이제한이 없음에도 65세가 넘자 상인회의 요구대로 발전기부금을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풀 가려진 농수로에 빠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 법원 “관리 책임 있는 농어촌 공사 30% 배상하라”

용변을 보기 위해 논 사이를 따라 걷다가 수풀에 가려져 있는 농수로에 빠져 2달 넘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이수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담양군 담양읍 도로에서 용변을 위해 차도 옆 농수로를 건너 인근 둔덕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개별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는 농업용수가 모이는 공간(깊이 1.8m)에 빠져 인대 염좌 및 파열상 등으로 70일 넘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공간은 개별 경작지로 공급되는 농업용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A씨는 무성한 수풀에 가려진 깊은 농수로와 해당 공간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농어촌공사가 농수로

근처 수풀을 제거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농어촌공사측은 인근 농지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람 통행을 예측할 수 없는 장소인 점을 들어 인근 수풀 제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돼 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1.8m 깊이의 공간도 추락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위험 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고 발생 장소가 통행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는 곳이라며 농어촌공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수풀이 우거져 있더라도 발길을 살피지 못한 A씨의 부주의가 중대한 원인이라며 농어촌공사 책임을 30%로 한정, 배상금을 1070여만원(위자료 300만원 포함)으로 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